2026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정책 지형 변화

- 산업별 영향과 한국 기업의 대응 전략 -

I. 선거 결과

지난 11월 3일(현지시간) 실시된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주요 격전지에서 의석을 확보하며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로써 여소야대 의회를 마주하게 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 야당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의회 간 갈등은 통상, 산업 관련 정책 분야에서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율촌은 ① 통상·관세 ② 에너지·전력 ③ 자동차·배터리 ④ 반도체·첨단제조 ⑤ AI·빅테크 ⑥ 대중국 경제안보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중간선거 이후의 정책 변화 가능성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분야별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II. 미국 중간선거 결과 평가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확보하였지만, 의회를 주도하는 것과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 법안은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장벽을 만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화당과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관세 권한 제한, 감세와 화석연료·청정에너지 관련 정책의 복원은 입법이 필요한 만큼 정부와 의회의 충돌 가능성이 높은 분야입니다. 반면 원자력 발전, 안정적 전력 공급, 역내 반도체 생산 지원과 경제안보 등은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로, 입법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또는 필리버스터로 입법이 막히면 의회는 청문회, 자료 요구, 소환장과 예산 협상을 통해 행정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원의 대통령 지명 고위직 공무원의 인준도 추가적인 압박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역시 기존에 위임된 권한과 행정명령을 활용하여 통치행위를 이어갈 수 있어, 선거의 패배가 곧바로 대통령의 레임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의회와 대통령의 대립이 장기화되면 예산 처리의 지연과 셧다운 위험을 키울 수 있어 우리 기업은 정책 방향뿐만 아니라 집행 일정의 변동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미투자와 관련하여 투자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실제 이행 성과에 대한 감독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6월 대미 외국인 투자의 이행 실태와 윤리성을 감독하기 위한 법안인 FIRM Commitment Act를 발의하여 외국인 투자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입법을 추진 중입니다. 본 법안은 현재 상·하원 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새로운 의회에서도 발의되어 최종 입법된다면 개별 투자계약상 약정 내용의 이행, 실제 고용창출 효과 등에 대해 대미투자에 참여한 우리 기업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주당의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입법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민주당은 의회의 조사·소환 요구권을 이용하여 정부를 압박하는 한편, 대미투자와 관련된 우리 기

업을 대상으로 투자 약정 및 투자 현황, 고용 등과 관련한 자료제출, 소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투자·고용 실적, 약정과 일정 변경 사유를 대외 공시 또는 정부 제출 자료와 일관되게 관리하고, 한편으로는 의회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사전에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III. 국내 산업·기업에 미칠 영향

1. 통상·관세 | 관세 인하 기대보다 실효적 부담과 계약을 우선 검토

중간선거를 통해 의회 구도가 야당 중심으로 개편되었지만,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기존 관세가 곧바로 무효화되거나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민주당이 물가상승과 소비자 부담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뚜렷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의 관세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수 있고 의회가 조사·소환·청문권으로 대통령과 여당을 압박하더라도 실제 관세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양국 간 통상합의에 따라 우리나라는 MFN 관세율 12.5%, 관세 상한 15%를 적용받고 있으나, 기업은 실효적 관세 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해 HTS 코드별 기본 세율 확인과 함께 거래처와 계약상 관세 부담 주체, 환급금의 귀속 대상, 법령 변경 시 가격 재협상 조건 등을 계약서상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에너지·전력 | 전력·발전 수요의 확대와 실제 수주 가능성 구분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화석연료 개발 확대와 청정에너지 지원 조정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OBBBA에 따른 태양광·풍력 세액공제 조기 종료는 신규 투자와 관련 기자재 발주에 부담을 주는 반면, 원전과 에너지저장기술(ESS)에 대해 유지되는 세액 지원은 관련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금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하였지만, 청정에너지 지원, 화석연료 개발 억제로의 전면 복원은 입법이 필요하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민주당은 화석연료 개발과 관련한 정부·기업을 대상으로 의회의 감독을 확대하여 정부·여당과 합의 가능한 개별 조항의 조정을 이끌어낼 수 있겠지만,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를 바꾸는 데에는 제약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업에는 원전·LNG·AI 전력 인프라 분야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한 미국의 투자 계획이 곧바로 우리 기업의 수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별 인허가와 재원 조달, 계통접속 및 비용분담 조건을 확인하고, 현행 세액공제와 공급망 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실제 계약·발주 일정에 맞춰 투자와 생산능력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자동차·배터리 | 미국 현지생산과 공급망(非중국)이 공통 과제

중간선거 이후 의회의 구도가 민주당 중심으로 재편되었지만, 미국 내 생산 확대와 중국 등 우려국가를 배제하는 공급망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당이 이러한 목표에 공감하는 만큼, 국내 기

업은 정책 전환을 기대하기보다 현지 생산과 조달 구조를 점검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관세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검토가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원산지 규정 강화와 더불어 멕시코 내 노동법 집행 강화가 USMCA에 반영될 경우 멕시코에 협력업체를 둔 우리 기업은 북미산 부품 비율과 협력업체의 노동법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동시에 핵심 부품의 대체 공급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지 생산과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은 2차전지 산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는 종료되었지만, 생산·투자 지원은 일부 유지되고 있어, 금지외국단체(PFE) 관련 요건 충족이 지원금 수혜를 위한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력망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지만, 해당 분야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규모는 의회와 정부·여당 간 예산 협의에 달려 있어 관련 예산의 확정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반도체·첨단제조 | 미국 내 생산 지원과 對中 기술통제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과 대중 기술 통제는 초당적 의제로, 중간선거 결과는 관련 정책의 방향성 자체보다 생산 지원 수단(보조금, 세액공제, 관세)과 對中 통제 방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역내 생산 지원에 대해 대통령은 투자 연계 관세를 IRC 48D 세액공제 연장 입법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의회는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세부적인 지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리 기업은 관세와 입법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48D 착공 증빙 확보, 2단계(투자 연계) 관세 면제 조건 협의, 보조금·세액공제·관세를 함께 반영한 투자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5. AI·빅테크 | 자율규제·산업육성 vs 안전·책임 강화 정책의 충돌

AI 분야에서는 정부의 자율규제 및 산업육성 기조와 민주당의 이용자 안전·사업자의 책임 강화 기조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양원 장악으로 입법 주도권을 확보했으나, AI 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힐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 하나로, 민주당 주도의 포괄적 연방법의 제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회의 입법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히는 경우 민주당 의회는 조사·소환·청문회 권한을 활용해 행정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에 AI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어, 우리 기업은 의회의 조사와 여론 이슈화로 발생하는 평판 리스크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규제 입법이 교착상태에 빠지더라도 AI를 규제하는 주별 규제는 기업 활동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서비스를 출시하는 기업은 AI의 유형에 따른 주별 규제를 파악하고, 딥페이크, 아동 개인정보, 저작권 관련 연방의 AI 규율도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對 중국 경제안보 | 미국의 공급망 투명성을 우리 기업의 경쟁력으로 활용

미국 양당은 중국 견제라는 큰 방향에는 의견이 같지만, 공화당은 거래 중심의 양자주의를, 민주당은 동맹 공조와 입법에 기반한 예측 가능한 체계를 선호합니다.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함에 따라 일방적 관세보다 동맹과 연계한 정교한 통제망이 강조되고, 행정부의 수출통제 권한을 법으로 제한하는

움직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 제120대 의회가 개원하고 같은 달 10일 미·중 무역 휴전이 끝나는 데다,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 강화를 규정하는 MATCH Act의 입법 가능성도 높습니다. 국내 기업은 이 시점을 단기 리스크 관리의 분기점으로 하여, 공급망 추적성 확보, 거래처 실질소유자 검증, FEOC 요건 충족과 함께 조선·배터리 등에서 생기는 반사이익 기회를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CONTACT

신영수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	02-528-5514	ysshin@yulchon.com
윤정근	변호사	공정거래	02-528-5179	jkyun@yulchon.com
이재근	변호사	송무	02-528-5596	jaklee@yulchon.com
조상욱	변호사	노동	02-528-5355	swcho@yulchon.com
박재현	변호사	기업법무 및 금융	02-528-5636	jpark@yulchon.com
오정한	변호사	송무	02-528-5742	jhoh@yulchon.com
전영준	변호사	조세	02-528-5661	yjchun@yulchon.com
김남호	변호사	부동산 건설	02-528-5465	nhkim@yulchon.com
김근재	변호사	조세	02-528-5572	kjkim@yulchon.com
박준모	외국변호사		02-528-5773	parkjm@yulchon.com
문승욱	고문		02-528-6699	swmoon@yulchon.com
이백순	고문		02-528-5245	bslee@yulchon.com
조구래	고문		02-528-5705	krcho@yulchon.com

법무법인(유) 율촌의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율촌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Copyright 2026 Yulchon LLC. All rights reserved